

kiri Weekly

2014.4.28 제281호

이슈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포커스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글로벌 이슈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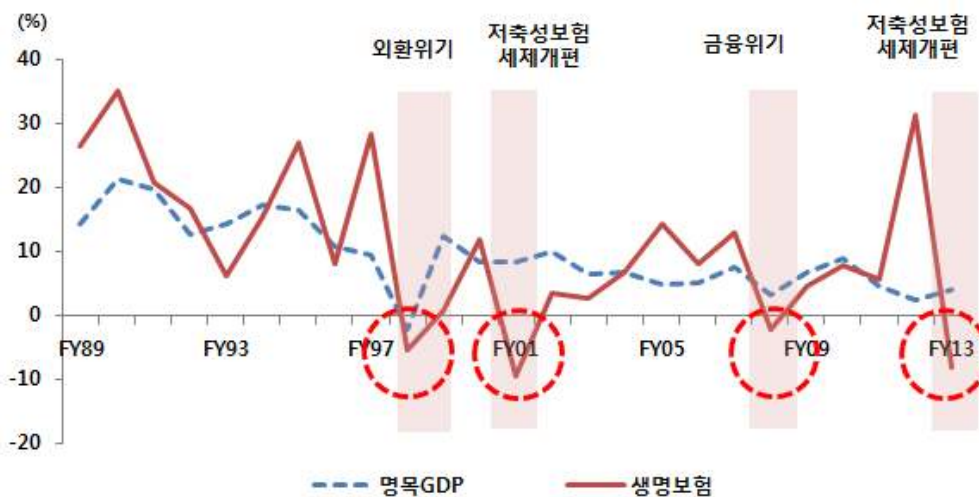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해 8.0% 감소하였으나 제도 개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세계개편에 따른 즉시연금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세계개편 기저효과로 9.0% 감소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3% 감소한데 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반면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8%의 양호한 증가를 기록하였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종목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성장 동력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반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변액보험 또한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망보험의 성장성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음.
-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장수위험 및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층의 보험상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의 확산,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증가 등 정보통신(IT)기술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임.

1. 검토 배경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인해 8.0% 감소함.
- 2012년 8월 세계개편 발표 이후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급증세를 이어 갔으나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 수입보험료가 급감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FY1998, FY2001, FY2008 이후 네 번째인데, FY1997, FY2008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이었으나 FY2001과 FY2013은 제도 개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됨.
 - FY2001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에 따라 FY2000 제도 변경 전 일반저축성보험 가입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보험연구원¹⁾에 따르면 2014년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명목경제성장률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보험연구원(2013),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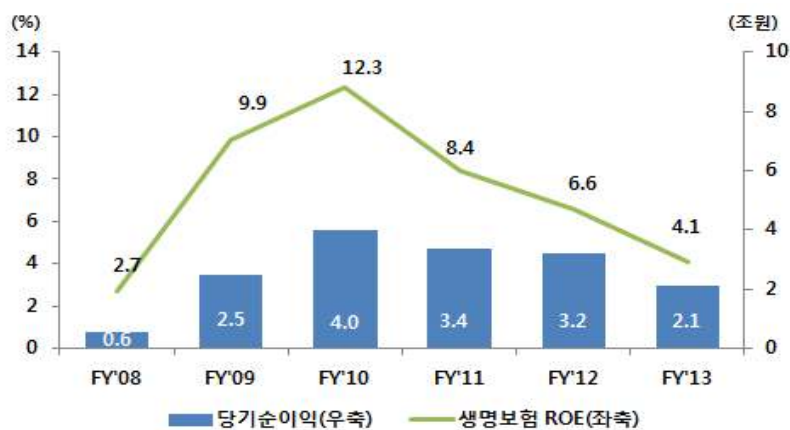
■ FY2013 수입보험료 감소는 일반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가운데 보장성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종목 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이후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모습임.
-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과 함께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저축성보험도 주식시장의 정체 속에서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신상품 출시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생명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함.
-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사망보험 저성장, 저축성보험 고성장 구조가 사망보험 완만한 성장, 저축성보험 성장 둔화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Y201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한 약 2.1조 원을 기록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은 FY2011 이후 악화되고 있음.

〈그림 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및 ROE 추이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산업이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RBC제도 강화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FY2013 생명보험 동향을 살펴보고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FY2013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 및 특징



■ FY201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감률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과 단체보험만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변액보험 또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신상품 출시 노력이 계속되면서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3.8%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세계개편에 따른 즉시연금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세계개편 기저효과로 9.0% 감소함.
-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0.9% 감소하면서 FY2012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1〉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감률 추이

구분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생존보험	-0.5%	8.8%	11.6%	5.0%	87.6%	-32.0%
사망보험	-1.1%	-1.7%	-0.8%	0.0%	7.4%	3.8%
생사혼합	0.5%	23.6%	28.2%	16.3%	81.1%	-9.0%
변액보험	1.2%	-2.3%	12.9%	9.7%	-0.3%	-0.9%
단체보험	-19.2%	25.7%	-0.5%	5.3%	-3.1%	27.5%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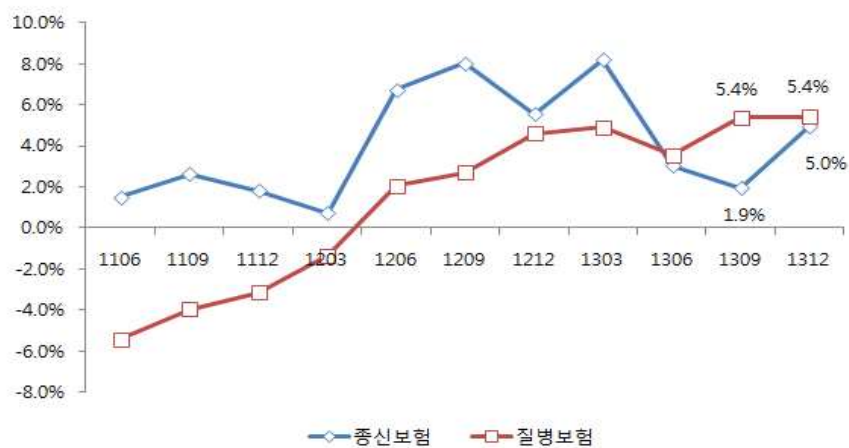
■ 종신보험, C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등으로 구성된 사망보험은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의 고성장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FY2008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의 부진한 모습을 지속한 후 FY2012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신수요 창출 어려움과 암보험, 질병보험 등의 소극적인 판매 등으로 FY2008 1.1% 감소한 이후 FY2009, FY2010에도 각각 1.7%, 0.8% 감소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저축성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풀림현상 해소를 위해 보장성보험 신상품 판매를 확대함.
- 사망보험은 FY2012 7.4% 증가(농협생명 포함)하면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며, FY2013에도 3.8%의 성장을 지속함.

■ FY2013 사망보험은 그동안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함.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과거 손해를 악화로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던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건강리스크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3〉 사망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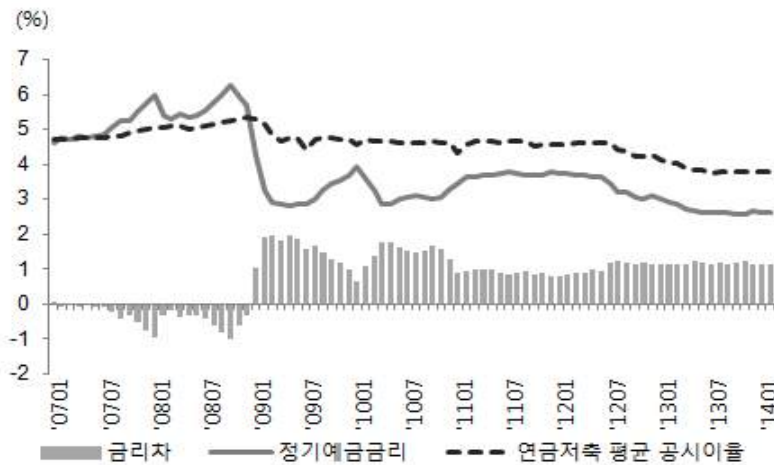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통합형보험 위주로 종신보험 공급확대에 나섰으나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 저성장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됨.
- 한편 사망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FY2013 3.8% 성장에 그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종신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고가이고 가입률이 높다는 점이 신규수요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은 장기적인 종신보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에도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하고 소극적인 판매에 나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위험률차익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2)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 큰 폭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부각된 생명보험회사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FY2012까지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음.
-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장기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저축성보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시중금리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를 나타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얻게 되는 세제혜택도 부각되면서 고성장을 지속함.
- 특히 일반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은행 창구를 통해 예·적금 상품과 일반저축성보험 상품의 비교가 용이해졌고 세제혜택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임.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FY2001 이후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해 왔으나 FY2008부터 FY2012까지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그림 4〉 시중예금금리와 연금저축 공시이율 차 추이



주: 연금저축 평균 공시이율은 월별 금리연동형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단순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 FY2012에는 2012년 8월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가 발표되면서 제도변경 이전에 가입하려는 수요 증가로 종신연금을 중심으로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기록적인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생사혼합보험 또한 수입보험료가 급증함.

- 이전까지는 즉시연금 가입 직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종신행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형 연금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함.²⁾
- 생사혼합보험은 비과세 인정 기간인 10년 이내 중도인출 시 일정 부분 비과세가 적용되던 점을 개선하여 연간 200만 원 이상 중도인출 시 과세하도록 함.²⁾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세법개정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FY2013 각각 87.6%, 8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³⁾

■ FY2013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 현상에 대한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FY2013에는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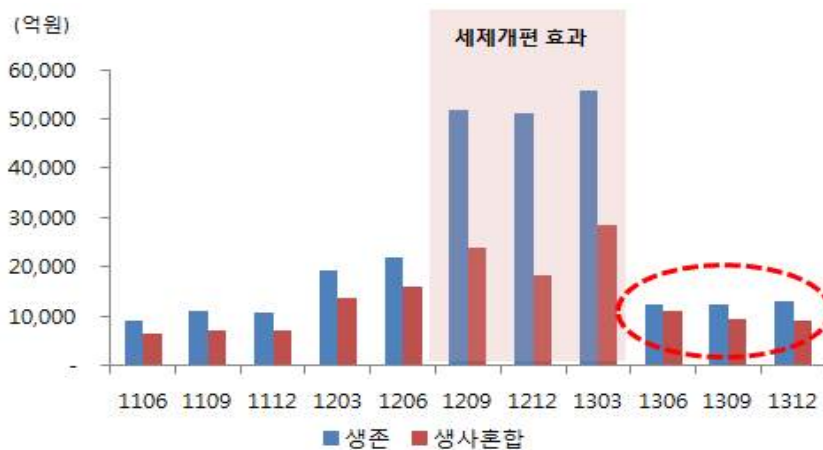
2) 2013년 1월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는 종신행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상속형 연금(보험료 2억 원 이상)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시 과세안도 삭제됨.
 3) 농협보험 신규진입 효과도 반영됨.

- 각 32.0%, 9.0%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나타났으며, 초회보험료의 경우 각각 69.7%, 49.4% 감소함.
- FY2001에도 전년도 세계개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각각 31.7%, 22.8%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하였고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또한 9.5%의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가 예정되면서 FY2000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함.

■ 한편 수입보험료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FY2013 들어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환경과 경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세 회복은 무리가 있어 보임.

-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세계개편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 2012년 1월~6월 사이의 분기 초회보험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FY2013 이후 초회보험료가 전 분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5〉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세계혜택 축소는 저축성보험 수요에 구조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강점이 계속해서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확대를 통한 규모 확대 경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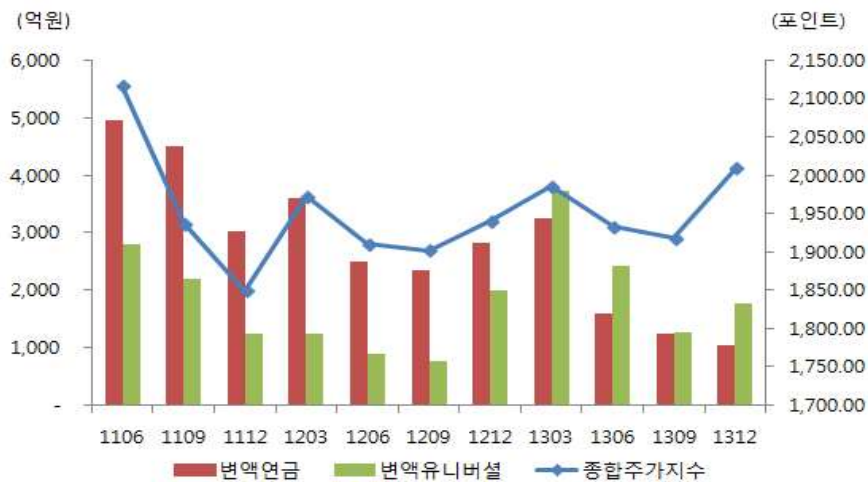
벌여왔던 점도 일반저축성보험 고성장의 한 요인이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와 RBC제도 강화 등에 따라 과도한 경쟁도 자제됨.

3)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지속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3% 감소한데 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이는 변액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주식시장이 2000 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했음에도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변액유니버설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하고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저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변액저축성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 등으로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임.

3. 시사점



- FY2013 수입보험료는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명목 경제성장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종목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반 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변액보험 또한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사망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보험료가 양호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저성장, 저축성보험 고성장 구조에서 사망보험 완만한 성장, 저축성보험 성장 둔화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성장 동력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새로운 종목이 출현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일반저축성보험이 부각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함.
 - 그러나 현재는 상품 포트폴리오가 선진화됨에 따라 신상품 출현을 통한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제혜택 축소, 저금리 환경 지속 한계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통한 고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사망보험의 성장성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아 보임.

- 다양한 건전성 규제제도 변화와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계획되어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RBC제도 강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심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직면해 있으며, 보험상품의 주 소비층인 30~40대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임.
- 이러한 가운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장수위험 및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보험상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상품들은 생명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의 확산,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증가에 따른 모바일화, 대량의 데이터 집적과 활용 등 정보통신(IT)기술 변화를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마케팅 등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또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약화는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여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들도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와 이해가 용이하도록 비교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임. [kiri](#)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김경환 수석연구원

요약

■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원화하는 것임. 그러나 별도의 기관 설립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는 취급정보의 최소화나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검찰발표, '14. 1. 8) 이후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 이는 민간성격을 갖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인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은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의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외에서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독점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부각
- 이하에서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외사례 및 취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핵심인 신용정보 집중(제공)기관은 그 기관의 법적 기반 및 역할 등에 따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 PCR)과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Private Credit Reporting Firm)으로 구분됨.¹⁾

- PCR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립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됨.
- CB(Credit Bureau)라 불리는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개 일반 기업의 형태 또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기구(협회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CB와 PCR이 함께 존재함.

-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정보공유는 전적으로 CB에 의존하는 반면, 프랑스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은 PCR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1〉 세계 주요국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국가	집중기관	공유정보	비 고
미 국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90년대 후반부터 우량정보 공유 기피현상 발생
호 주	CB	불량정보	우량정보 집중 금지
일 본	CB(준PCR)	불량정보 · 우량정보	업권별 신용정보 공유체제(연체정보는 통합관리)
독 일	PCR ·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이탈리아	PCR ·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프 랑 스	PCR	불량정보	민간 신용정보회사 설립 금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 10),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p. 87~95 참조.

■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PCR의 설립은 아래의 목적하에 주로 CB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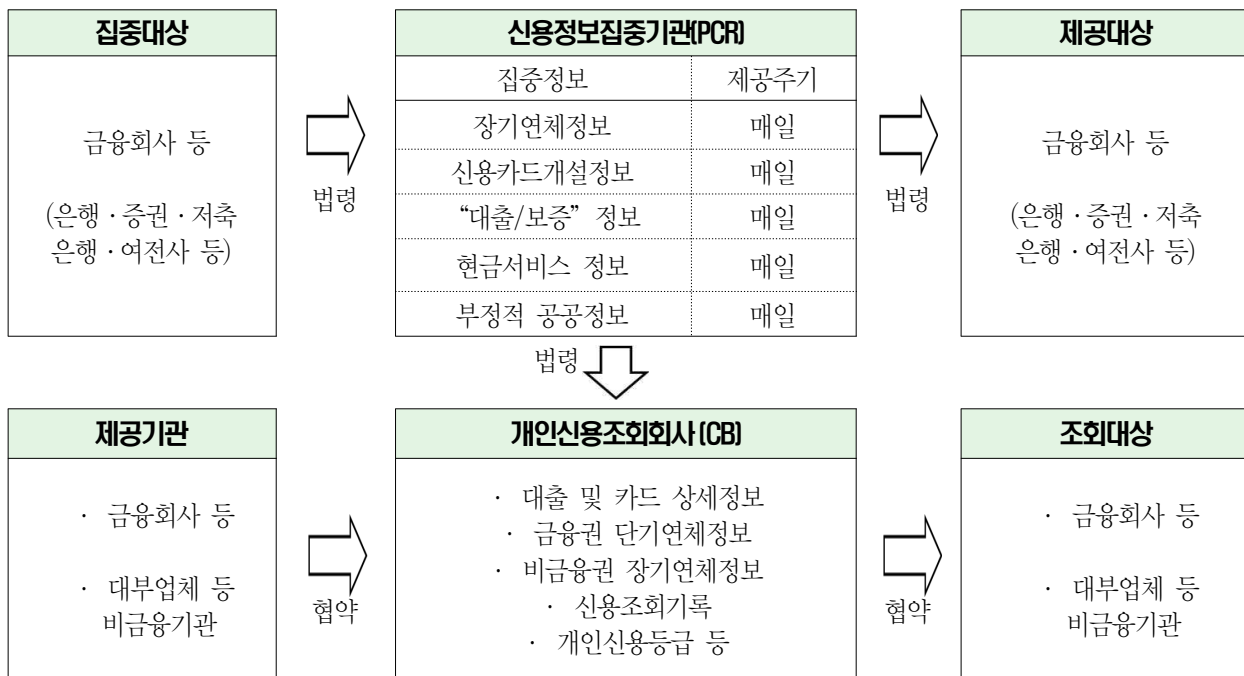
-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

1) 박찬일 · 남수중(2009. 10. 30), 「금융부문의 발전과 법·제도의 역할: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정보공유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106~108.
 2) 박찬일 · 남수중(2008. 4), 「중국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 법금융학적 관점」,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pp. 277~278; 이인호 · 강경훈(2010. 3), 「PCR과 민간 CB의 상생적 발전 방안」,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pp. 12~28. 참조.

- 독일의 PCR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의 PCR은 실제로 대규모 차입자의 파산에 따른 은행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대응책으로 설립
 - World Bank의 200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PCR을 설립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이 PCR 설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응답
 - 미발달된 CB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필요
 - PCR은 채권자(신용제공기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CB산업의 한계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을 극복
 - CB의 정보자본 축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독과점시장을 형성
 - 긍정적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는 제도적으로 기초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자율적 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민간 CB인 신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공유·활용되고 있어, PCR과 CB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적인 성격을 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며,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통 활성화는 민간 CB가 담당하는 구조임.
- 정보의 공적 집중을 통한 신용정보의 관리와 공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 5개의 업종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함.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임.
 - 현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저축은행연합회 및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음.
- 계약에 기초한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과 신용정보의 가공·평가 및 조회서비스 제공은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가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등의 민간 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관



자료: 금융감독원(2013. 3, 5),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참조.

■ 올해 초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기관의 공적기관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인 CB에 무작위로 제공함에 따른 공적 기능의 약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관련 산업의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해당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대변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인식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모두 6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이 곤란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공적 기능 부여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개선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격, 역할 등을 재정립해서 정보보호·보안체계에 대한 관리와 책임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금년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각 협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으로 모두 이관하도록 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³⁾
- 한편 4월 23일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⁴⁾

■ 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의 공적 기능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 은행연합회는 외형상 민간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법규에 의해 그 권한과 기능이 세밀히 규제되고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⁵⁾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차선책으로 외국의 예처럼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등에 PCR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행 방식보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내부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골격을 유지하거나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나가되, 현시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취급정보 최소화나 CB로의 정보제공 금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리에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취급정보 최소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도 은행연합회가 집중하는 기초정보만을 취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PCR이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취급정보 최소화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인식 및 신뢰성 제고
- (CB로의 정보제공 제한) CB는 민간회사로서 신용정보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PCR의 보유 정보를 CB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거나 건별 조회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PCR의 공적 취지를 유지하고 정보 남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최소화. **kiri**

3) 국회사무처(2014. 2. 21),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322회 국회(임시회) 정무소위 제1차 회의, p. 5.

4) 파이낸셜뉴스(2014. 4. 23자 인터넷판), 「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보호법 의견 ‘접근’」.

5) 한국개발연구원(2013), p. 84.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 2009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던 전 세계 GDP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¹⁾

- FSB(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2년 말 전년대비 약 4조 달러 가량 늘어난 71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신용공급 총액의 약 24%, GDP대비 117%를 나타냄.²⁾
- 미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감소³⁾하였으나 저금리 환경에서 대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2011년 말 GDP대비 154.5%에서 2012년 말 165.9%로 확대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감한 것과는 달리 유로 지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2012년 말에는 전년대비 17.3%p 늘어난 183.7%로 확대됨.

〈그림 1〉 세계 그림자 금융 추이



자료: FSB.

〈표 1〉 주요국 그림자 금융 GDP대비 비중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미국	154.5	165.9	11.4
유로존	166.4	183.7	17.3
한국	99.9	108.3	8.4
네덜란드	548.4	564.7	16.3
영국	383.8	354.4	-29.4
일본	61.4	64.4	3.0
중국	20.0	25.8	5.8

자료: FSB.

1) FSB는 그림자금융을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하게 신용을 중개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 FSB(2013. 11. 14),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3'.
 3) 미국 그림자금융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8%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4%를 기록함(한국은행(2012. 10),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참조).

-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1,561조 원, GDP대비 비중은 2012년 말 기준 전년대비 8.4%p 증가한 108.3%를 기록하여 26개국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림자금융이 위기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되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모색됨.
 - 그림자금융은 은행권에 접근이 어려운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공급 과정이 긴데다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위험의 전이(contagion) 가능성이 크고 레버리지 증가로 금융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함.
 -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FSB는 2011년 10월 그림자금융 규제 권고안을 처음으로 제시함.
 - 또한 FSB는 2013년 9월 은행과 그림자금융 시스템 간의 파급효과 축소 방안, MMF 펀드런(fund run) 발생 시 공동기준 마련, 증권화에 있어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위험보유 기준 등 5개 부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함.

〈표 2〉 그림자금융 부문의 분류

금융상품	금융기관 ¹⁾	관련 리스크	분류	
MMF, RP, CP, ABCP, 콜머니, 증권대차(현금담보)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MMF, 헤지펀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협의의 그림자금융	광의의 그림자금융
ABS, MBS 등 자산 유동화 채권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회사, 증권회사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신용리스크		
수익증권, 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신탁계정(은행·보험·증권회사)	그림자금융 확대		
기타(신용보증,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신용리스크 및 그림자금융 확대		

주: 1) 일반적으로 원금보장 없이 자금운용 성과가 자금공여자에게 돌아가는 실적배당형 신탁, 집합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및 MMF 제외)와 자산유동화 과정을 단순히 지원하는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기관 등은 협의의 그림자금융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2012, 10),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p. 3 표 인용.

- 중국의 GDP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0년 말 약 13% 수준에서 2012년 말 약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4) 박원석 국회의원 보도자료(2014. 4. 2)를 참조함.

- 중국의 GDP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림자금융이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음.⁵⁾
 - 중국의 지방 공기업이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채무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이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됨.
 -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은행 대출금 비중이 높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늘어나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국내 증권회사들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가 늘어나고, 공모도 허용 이후 증권대차 거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규제 강화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자산유동화 증권과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이 2013년 전년대비 32조 원이나 증가하였음.
 -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림자금융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단, 그림자금융의 순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규제방안은 그림자금융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정적 측면은 억제하는 합리적 방안이어야 함.
- 그림자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는 기업의 부채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채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기업들의 부채조정 지연이 그림자금융 확대와 기업 레버리지 증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

(FSB, 한국은행 등)

5) 한국은행(2014. 3. 9), '중국의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및 은행건전성의 상호관계'를 참조함.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4년 4월 4일 보험회사 M&A(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함.

- CIRC는 2014년 6월부터 보험회사 M&A 시 필요한 자금을 100%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여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 50%까지 차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보험회사 인수자에게 적용되던 투자제한 규제¹⁾를 폐지하였고 동일 인수자가 동일 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로 인해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2개의 보험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번 조치는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보험회사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산업의 진입·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내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지출 증가와 자본시장 불황 등으로 장기적인 적자 상태임.
 - 2011년 적자를 기록한 보험회사는 전체 101개 비상장 보험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65개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8월 전통적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선이 폐지된 것과 같이 향후 자동차보험 요율 및 상품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되고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보험회사들이 많아질 것임.

■ 이번 보험회사 인수·합병 규제완화가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성장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보임.

1) CIRC는 2013년 4월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3년 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 2013년 말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69.5%,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74.3%이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시장에서 5.6%, 손해보험시장에서 1.3%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2010년 시행된 『보험회사지분관리방법』은 동일 투자자가 동일 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성장세를 둔화시켰음.
 - 보험회사 지분관리 규제강화로 동일 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운영했던 네덜란드의 ING그룹, 캐나다의 Manulife Financial그룹은 각각 John Hancock Tianan Life Insurance, Pacific-Antna Life Insurance를 매각함.
- 이번 규제 완화로 중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음.

■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M&A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험산업 부문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중국 보험시장 진출 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 보험전문가들은 2014년 하반기 이후 M&A로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낮아 M&A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방식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AXA그룹은 2013년 4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인 Tian Ping Insurance를 인수하여 중국 내에서 최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로 부상한 바 있음.

(WSJ, Sina Financial 등)



이해랑 연구원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국내 지표		2013년 말	2014.4.17(목)	2014.4.24(목)	전주대비
금리	CD금리(91일)	2.66	2.65	2.65	0.00
	국고채(3년)	2.86	2.87	2.88	0.01
	회사채(3년, AA-)	3.29	3.30	3.31	0.01
환율	원/달러	1,055.30	1,037.10	1,038.30	1.20
	원/엔(100엔)	1,001.25	1,012.74	1,015.30	2.56
	원/유로	1,453.99	1,432.55	1,436.49	3.94
	원/위안	174.32	166.76	166.16	-0.60
주가	KOSPI	2,011.34	1,992.05	1,998.34	0.3%
	KOSDAQ	499.99	565.75	561.12	-0.8%
	KOSPI 보험지수	18,372.19	17,286.86	17,173.19	-0.7%

*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3개(손해보험 10사, 생명보험 3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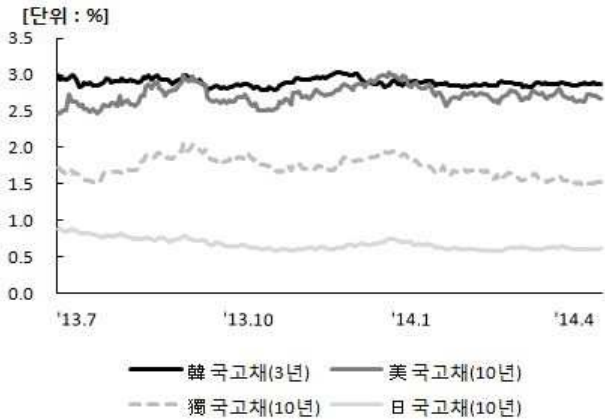
■ 해외 주요 경제지표

해외 지표		2013년 말	2014.4.17(목)	2014.4.24(목)	전주대비
금리	LIBOR(3개월, \$)	0.25	0.23	0.23	0.00
	미국 국고채(10년)	3.03	2.72	2.68	-0.04
	독일 국고채(10년)	1.93	1.52	1.53	0.01
	일본 국고채(10년)	0.74	0.61	0.62	0.01
환율	엔/달러	105.37	102.41	102.27	-0.14
	달러/유로	1.3768	1.3813	1.3835	0.0022
	위안/달러	6.0539	6.219	6.489	0.2700
주가	미국 DowJones	16,576.66	16408.54	16501.65	0.6%
	미국 Nasdaq	4,176.59	4095.52	4148.34	1.3%
	영국 FTSE100	6,749.09	6625.25	6703	1.2%
	독일 DAX30	9,552.16	9409.71	9548.68	1.5%
	프랑스 CAC40	4,295.95	4431.81	4479.54	1.1%
	일본 Nikkei225	16,291.31	14417.53	14404.99	-0.1%
	중국 상해종합	2,115.98	2098.89	2057.03	-2.0%
	대만 가권	8,611.51	8944.16	8945.45	0.0%
	홍콩 항셱	23,306.39	22760.24	22562.8	-0.9%
	DowJones 보험지수	241.30	236.16	238.33	0.9%
실물지표	두바이유	107.89	105.87	105.95	0.1%
	금(NYMEX)	1,205.65	1295.19	1293.36	-0.1%

* DowJones 보험지수(DJTINN)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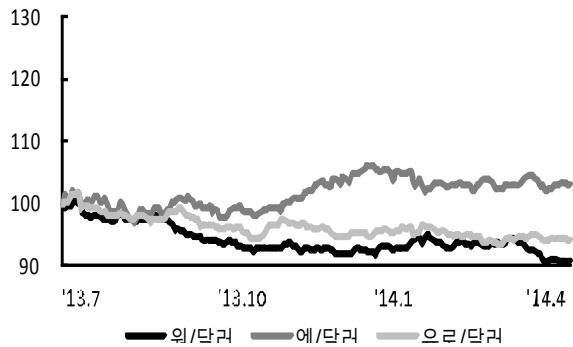
■ 주요지표 비교차트

〈그림 1〉 주요국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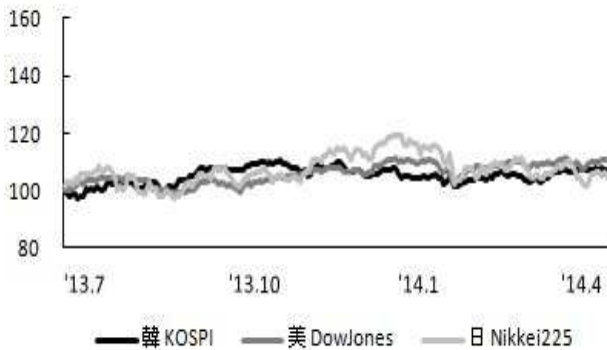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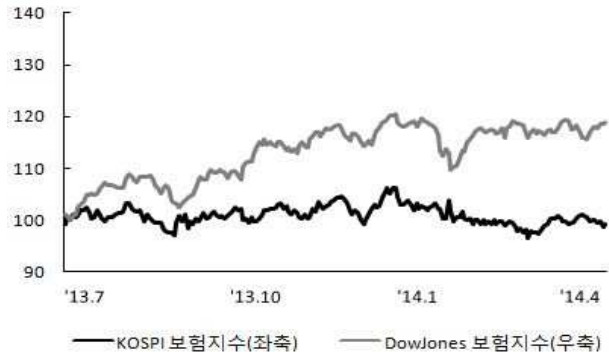
주: 2013년 6월 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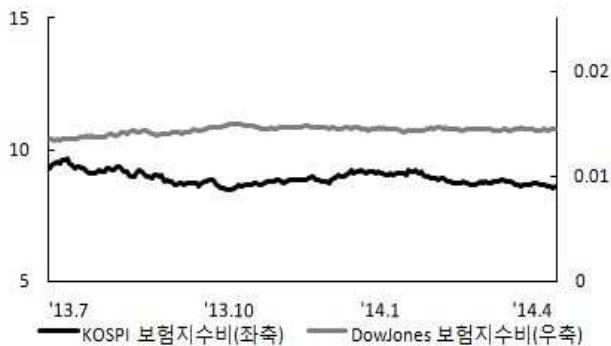
주: 2013년 6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4〉 한국, 미국 보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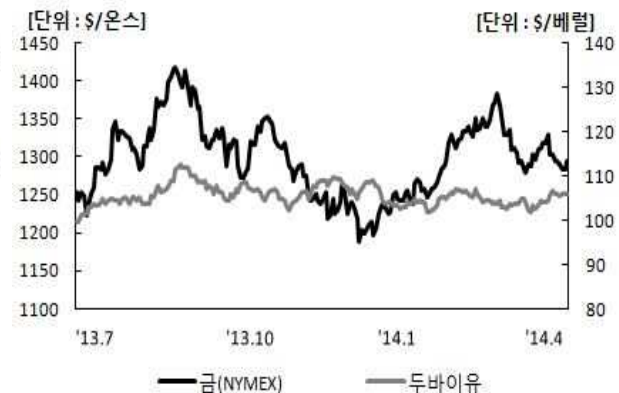
주: 2013년 6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5〉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주: 보험지수비=보험지수/전체지수로 계산함.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6〉 국제유가,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